| 한 '운하보고서-명예훼손 고소' 공방 |

李 "보고서 靑-朴 야합" 朴 "고소취하 말라" 전환

"朴 전 대표는 사과하고 유승민 의원직 사퇴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10일 '경부운하 재검토 정부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박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에게 먼저 전해진 것과 관련, 정권 차원의 '이명박 죽이기'에 박근혜 전 대표 캠프가 사실상 공조하며 '야합'했다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박희태 경선대책위원장은 이날 "범죄수법으로 빼낸 자료를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은 야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유승민 의원이 당시 (정부자료 공유를 부인하며) '의원직을 걸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 전 대표가 사과하는 일밖에 더 남았겠느냐"고 압박했다.

장광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표 캠프의 대운하 보고서 '야합 실상 확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운하 죽이기=이명박 죽이기'라는 등식하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물론 박 전 대표 캠프 전체가 총동원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전 시장계 한나라당 의원 27명도 이날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박근혜-노무현정권 야합'을 비난하며 유승민 의원 등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의 팬클럽인 MB연대도 이날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짜고 벌인 공작정치에 박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짓밟은 배신행위"라며 "유승민 의원과 (보고서 존재사실을 유 의원에게 알린) 방석현 교수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10일 오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둘러싼 자료 유출과 관련, 의원들과 함께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박명재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측 금권 선거 조짐" 선관위 대책 마련 촉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은 10일 고소 취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 또 금권선거운동 조짐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김재원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전 시장 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당 검증위가 (의혹을) 밝힐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고소 취하로 문제를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도부의 고소취하 요구에 '이명박 구하기용'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면서도 당심을 고려, "고소 취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내놓았던 전날의 캠프 공식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 전 시장 측이 전혀 당의 검증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설사 이 전 시장이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필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캠프 차원의 입장 정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또 경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우려대로 전국적으로 '돈 선거'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앙선관위에 '50배 포상금' '매칭펀드' 제도 등을 통한 금권선거 방지책 실시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캠프의 한 인사는 "지금 이 전 시장 측에서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돈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면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몰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실상 이 전 시장 측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박형준·진수희의원 소환키로

김재정씨 부동산 정보 접근자 파악할 자료 확보

대선 경선후보간 검증공방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등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김재정씨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등에 접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씨 등이 관련 자료 유출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건교부와 행자부, 국세청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의 부동산 매매내역 등 거래 자료는 제외됐으며 관련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누가 로그인(log-in)을 했는지 등 사용자의 신원(ID)을 보여주는 접속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으로부터는 이 후보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인사들의 내역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분석해 언론사에 유출된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어느 기관이 갖고 있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해 열람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청와대가 한나라당 박형준·진수희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나 김유찬씨가 한나라당 박형준·정두언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 등과 관련해 이들 의원을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의원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들 가운데 몇 의원은 금명간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李측 소취하' 압박 한나라당 지도부

한나라당은 10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부동산 의혹 등과 관련, 고소를 제기한 이 전 시장측의 소취하를 거듭 압박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이 전 시장측이 고소 취하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옳은 판단이 못될 것이다. 우리 문제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고소장을 들고 검찰로 뛰어가거나 이상한 문건 입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경선 승리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고소·고발은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정배 "믿음직한 개혁엔진 되겠다"

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올 1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10일 "대담한 변화로 민생강국 코리아를 열어가는 믿음직한 개혁엔진이 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고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생이 파탄 난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역사를 과거로 돌릴 것"이라며 "이들에 맞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시대와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생강국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사람중심의 성장 ▲희망 격차의 극복 ▲공정한 사회의 실현 ▲평화실력국가의 실현 등을 4대 정책 의제로 내세웠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중·고교 교과목 수 축소와 국공립대 통합 등을 골자로 한 교육 형평성 강화 ▲1가구당 최소 1명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1가구 1 정규직화 ▲공공거주주택 확충과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 등 교육·직장·주거 등 3대 민생문제와 평화문제를 엮은 '3+1 정책'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조선 총독이 거주했던 식민 시대의 치욕과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터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그 자리에 민주열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함께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으며 출마선언식에는 정대철 대통합추진모임 대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중도통합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최열 미래창조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민생정치를 역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운하, 이회창 후보가 폐기한 공약"

정근모 명지대 총장 밝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진영에서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에서 용역을 의뢰한 세종대 연구팀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대운하 프로젝트를 보고받았으나 타당성이 부족해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명지대 총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2002년인가 세종대 연구팀에서 대운하 보고서를 이 전 총재에게 가지고 와서 검토했는 데 (검증 결과) 안된다고 해서 안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 전 총재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과학기술특보를 맡았던 서상기 의원은 "약간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현재 세종대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또 "누가 경선에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의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운하가 현실화되면 환경·수질문제가 엄청 중요해질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한다. 나는 정책 전문가들이 대운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토목환경과 교수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나라 같이 수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수자원의 확보와 보호가 가장 중요한 데 (운하 프로젝트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대형 화물은 근해를 통해 얼마든지 나를 수 있고 육로수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혁규·김종률 의원, 李측 맞고소

한나라당에 의해 수사의뢰된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캠프 대변인 박형준 의원을 맞고소했다.

김종률 의원은 10일 자신과 김혁규 의원 명의로 이 전 시장과 캠프 대변인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 문제는 정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전 시장 측에서 적반하장식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수사의뢰하고 공개 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일 "이 전 시장을 음해하려고 공공기관의 수사·소송기록,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열람하거나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김재윤, 박영선, 송영길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